

예비군훈련 재개 했지만 실상은 1~2시간 교육에 그쳐

하루 8시간 훈련으로 실시하지만 온라인교육 등으로 6~7시간 감면

윤석열 정부, 국방비 예산 삭감 예비전력 중요성 더 퇴색될 듯

코로나19 감염증으로 2년 넘게 소집이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2일 재개되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로 들며 예비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선 예비전력 실무자들은 '말로는 뭐든 못 해'라는 눈치다. 1일 8시간으로 한정돼 실시되는 예비군소집훈련임에도 최대 6~7시간이 면제되는 특전이 부여되면 훈련은 '말장난'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날 예비군들에게 적극적인 소집훈련을 독전하기 위해 나선 이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국가위기 상황에서 예비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가해 달라"면서 예비전력 실무자들에게는 예비군 소집훈련을 통한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예비군훈련이 전면 중단되기 전이었던 2019년 3월4일 예비군들이 경기도 남양주 56사단 금곡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마일즈 장비로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예비군훈련 재개, 홍보에는 열심... 내실은 고민했다

앞서 육군은 지난주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서초과학화예비군훈련대로 초청해, 과학화예비군훈련 체험을 시키는 등 예비군 훈련 재개와 관련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의 예비전력 실무자들은 '실효적 예비전력 강화는 헛자랑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초 예비군 소집훈련을 1일 8시간으

로 1회만 소집하는 것은 <메트로경제신문>이 지난해부터 일선 예비전력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안했던 내용이다. 이 제안의 요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조심하면서, 장교 및 부사관 등에 한해 부대 증·창설과 부대지휘 절차훈련을 하자는 것이었다. 제한된 8시간으로는 몸으로 체득할 교육훈련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1회로 끝나는 소집훈련은 동원예비군과 일반

예비군 구분없이 8시간으로 끝나지만, 2020년과 2021년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은 온라인 예비군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에게는 각각 2시간의 소집훈련을 감면해준다. 여기에 현혈봉사까지 더해지면 총 6시간이 감면되고, 이동거리가 멀거나 수입군 부대 관할지역 밖인 경우 추가로 훈련시간이 감면된다.

한 예비전력 실무자는 "차떼고 포 떼면 1~2시간 할 소집훈련을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면서 "대위급 이하 장교 대다수는 예비군 소집교육 경험이 전무한데 다 정에 예비군이라 불리는 비상근 예비군들도 훈련보상비만 챙길 정도로 기강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원예비군은 특히 취약한데, 언론에 공개할 잘 갖추진 과학화 예비군훈련대가 아닌 노후된 훈련장을 사용한다"면서 "훈련교관도 과학화예비군훈련대의 예비군 지역대의 군무사무관(군무원)에 비해 경험이 많이 부족한 현역장병과 비상근예비군이 교관으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봤다면 예비전력 예산 증액해야

이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들며 예비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윤석열 정부에서 더 퇴색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느 정부보다 국방비를 대폭 증액했던 문재인 정부는 예비전력 예산을 국방예산 대비 1%까지 증액하려고 했지만, 0.3~0.4%선을 유지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집권시작부터 국방비를 삭감하고 주요무기 도입 및 장병 개인 방호장구류 예산을 날려버렸다.

이렇다 보니 국방예산 편성에서 최후순위인 예비전력 예산은 감액될 위기에 선 상황이다. 더욱이 '지역방위부대(향토사단)'들의 다수는 부대 예산의 상당수를 국방예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육성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선거로 달궈진 민원사업에 육성지원금이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훈련 재개를 시작으로 훈련소집 대상 예비군들에게 1일 8시간의 소집훈련과 온라인 원격교육 1일 8시간을 혼합 실시할 계획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국제 경유값 인하분 국내 선제반영 당부”

산업부, 석유시장 점검회의 “향후 주유소 경유가격 하향 예상”

국제 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나마 국제 경유 가격은 하향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국민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업계에 선제적인 공급가격 인하분을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최근 지속적인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물류업계 등 대상 경유 유

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등 국민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 바 있다.

석유공사는 최근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대해 러·우 전쟁 장기화 및 각국의 러시아산 석유 제재강화 등에 따른 공급불안 요인과 미국 휴가철 석유제품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은 최근 급상승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으며, 지난달 26일 이후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000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다만 “최근 국제 경유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어 따라, 국내 공급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주유소의 경유 판매가격도 일부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정유업계는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 국내 석유류 가격안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민생안정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알뜰공급사도 경유 공급가격 인하분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유소업계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1일 유류세 인하를 30%까지 확대한 이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관련업계와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외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주 1회 이상 업계와 점검회의를 열어 석유제품 가격 안정방안을 지속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초미세먼지 4% 개선... 계절관리제 성과

환경부, ' 좋음' 일수 35→40일 늘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4% 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이 제한됐고,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았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2일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 12월~2022년 3월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3.3 $\mu\text{g}/\text{m}^3$ 으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전년도 평균농도 24.3 $\mu\text{g}/\text{m}^3$ 보다 1 $\mu\text{g}/\text{m}^3$ (약 4%) 줄어들었다.

일평균 농도 기준으로는 '나쁨'(36 $\mu\text{g}/\text{m}^3$ 이상) 일수가 20일에서 18일로 2일 줄었고, ' 좋음'(15 $\mu\text{g}/\text{m}^3$ 이하) 일수가 35일에서 40일로 5일 늘었다.

이 기간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등 정책효과로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0.9~1.4 $\mu\text{g}/\text{m}^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감소 등 국외적 요인으로 1.2~2.9 $\mu\text{g}/\text{m}^3$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중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3차 계절관리제 기간 43 $\mu\text{g}/\text{m}^3$ 로 2차 때(47 $\mu\text{g}/\text{m}^3$)보다 4 $\mu\text{g}/\text{m}^3$ 낮았다. 베이징(34 $\mu\text{g}/\text{m}^3$), 허베이(50 $\mu\text{g}/\text{m}^3$), 텐진(46 $\mu\text{g}/\text{m}^3$) 등 한국에 영향을 많이 주는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2차 때와 비교해 14~36%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3차 계절관리제 기간 2차 때보다 강수일과 강수량은 적어 기상여건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동풍이 분 날은 적은 반면 풍속이 1.2% 이하인 저풍속일은 많았다. 이로 인해 3차 때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0.6~0.9 $\mu\text{g}/\text{m}^3$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대리점 온라인광고 제한, 한국지엠 '제재'

공정위 “경영활동 간섭행위 해당”

한국지엠이 자신이 공급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에 특정 매체 이외의 온라인공고를 금지하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한국지엠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온라인 광고활동을 특정한 매체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6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판매 거래 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대해 자신이 마련한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통해 페이스북을 제외하고 다른 온라인매체에는 광고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대리점의 고유한 경영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판촉활동인 온라인 광고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지엠은 이런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지침을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해 벌점 부과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 활동지침을 준수 하겠다는 약속서를 징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판촉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라며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지엠에 대해 행위 중지, 향후 동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고, 이런 시정명령을 받았다 는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받았다.

공정위는 다만, 한국지엠의 이러한 범위외행위가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을 통해 한국지엠이 부당이익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60억 모태펀드 조성... 사회적기업에 투자

고용부, 정부 45억 민간 15억 출자

올해 정부 예산과 민간 자본이 결합한 총 6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가 조성돼 우수 사회적기업 육성에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출자한 45억원, 민간 출자 15억원으로 구성된 총 60억원 규모의 '제8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모태펀드)을 결성했다. 모태펀드 운용사는 임팩트스퀘어로 선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고용부는 지난 2011년부터 총 468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지금까지 총 50개 사회적경제 기업에 314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매출액이 투자이후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원승일 기자